

인쇄하기

x 취소

[기고] 아베 내각의 언행 직시해야

- 5일자 마이클 그린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칼럼에 대한 반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한·일 관계는 지금 먹구름이다. 정상회담 개최는 낙관할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의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정상이 흥금을 터놓을 수 있는 개인적 신뢰를 갖고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전략적 밑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베 내각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자극하는 언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국·중국을 물론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면서 '부전(不戰)의 결의'를 언급하지도 않고 당 강령에서도 삭제했다. 민주당 오카다 의원이 중의원에서 네 번이나 거둬질 질의를 했는데도 아베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길 거부했다.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하라는 지침을 정했다.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그린 교수가 이야기하듯 정치지도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위의 모든 사안은 아베 내각의 멤버와 자민당 정치지도자들이 선도(先導)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대다수 일본 국민은 우호적 한·일 관계를 바라지만,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아직 갈등을 잠재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린이 지적하듯, 아베 내각과 의견을 달리하는 일본의 중도나 중도 좌파의 정치지도자들조차 아베에게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할 의사도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계 내부의 자체 정화작용이 기능부전이다. 이 틈을 타고 일본의 주간지들은 마치 한국이 불만의 속죄양인 양 무분별하게 비판적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마저 거리에 등장했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배외주의적 민족주의에 경종을 울린다면 이 같은 움직임들은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지도자들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나도 그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베 총리의 2015년 담화에서 반성과 사과를 강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내다보는 틀을 제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아베는 한국의 관심사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협의의 강제성 부재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된 행위에 동원됐다.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자 보

편적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다. 아베 총리가 작년 유엔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해 반대한다면, 전전(戰前)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 강제 징용 판결은 한국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다.

한·일이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이유를 외부로부터의 위기에서 찾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위기 탈피를 위한 협력은 단기적 처방일 수 있지만, 장기적 협력은 보장할 수 없다. 양국 지도자가 공히 과거사에 사로잡힌 현실에 대한 내부적 성찰을 깊이 하고, 지역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합의에 다다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한·일이 거시적 지역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의 방위 현실 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전전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전후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이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고 일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인쇄하기

 취소